

# 도내 중기 기술경쟁력 강화

## 두세훈 도의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조례안' 발의 사업 지원 기틀 마련·기술혁신형 기업 발굴육성에 중점 시행되면 자금·교육·지방세제 지원 등 가능해질 듯



전북도의회가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의 발판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 제정에 나선다.

전북도의회 두세훈(원주2·더불어민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은 연구개발과 사업화, 기술혁신 경영 기술지도, 정보화 지원 및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등 기술혁신 촉진에 필요한 각종 사업 지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기술혁신'은 기업경영 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존 기술의 개선이나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의미하며, 기술혁신형 중

한 실정이다"면서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이 제정되면, 도지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도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두세훈 의원은 "그동안 도청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사업 관련 전담부서가 없어 신규사업 추진 시 혼선이 많았는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업무의 분장을 명확히 확립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례안이 시행되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각종 자금지원과 기술인력 양성 교육 등을 지원받게 되며, 지방세제 지원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례안은 20일 의회회당 상임위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며, 28일 열리는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유호상 기자



전주시의회가 15일 의회 부활 30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마련한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이 인사말을 남기고 있다.

# '지방의회 30주년' 자치분권 2.0시대 본격 준비

### 전주시의회, 의회 부활 30년 기념식 개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 다짐

전주시의회가 15일 의회 부활 30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자는 취지에서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엄격한 방역 수칙 준수 속에 최소화해 진행했다.

이날 오전 제38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주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에는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김승수 전주시장 등 집행부 간부들이 참석

했다. 특히 기념식에는 역대 전주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경우성(8대 전반기), 최찬욱(8대 후반기), 조지훈(9대 전반기), 이명연(9대 후반기), 김명기(10대 후반기) 의장이 참석해 의회 부활 30주년을 축하했다. 행사는 시의회 연혁 보고를 시작으로 기념사 및 축사, 홍보 영상 시청, 꽃다발 전달식, 기념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 참석자들은 기념식 후 지방의회 30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허심탄회

한 의견을 나누며, '시민과 함께 하는 전주시의회' 구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동화 의장은 "전주시의회는 자치분권 2.0 시대에 맞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민의의 대변인으로서의 책무를 마음에 새기며,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의원 모두가 힘을 모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소상공 손실보상 강화·방역 보장 위한 추경 증액"

### 민주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15일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제2차 추경을 통해 국민에게 지급하려고 하는 재난지원금은 국민 80%가 아닌 전 국민에게 지급돼야 한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강화 및 백신·방역 보장을 위해 이번 추경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당초 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보다 6,000억원을 추가로 증액,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

치 등으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대폭적인 증액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시급히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 계획대로 11월까지 집대결을 형성하는 데 백신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돌봄 예산의 확대, 입원환자 치료제 구입, 진단검사비 지원, 격리지원차표비,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조사 분석 등 2,000억원 이상의 방역 관련 예산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최근 코로나 확진자 급증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추경안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보다 든든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안정적인 백신공급과 예방접종 확대,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번 제2차 추경안의 시급한 처리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전주시의회 5분 발언

### "전주실내체육관, 다목적으로 설계해야"

**송영진 시의원 "농구만을 위한 경기장, 효율성 ↓  
종목 활용도 높이고 컨벤션 등 가능 기능도 갖춰야"**

새로 짓는 전주 실내체육관을 원래 목적에 맞게 다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전주시의회 송영진(더불어민주당, 혁신·덕진·팔복·조촌·여의동) 의원은 제38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주실내체육관이 프로농구단 KCC이비스를 위한 전용구장 건립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닐지 시민의 기대만큼이나 우려가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따르면 현 전주실내체육관은 1973년 준공돼 48년 동안 지역의 랜드마크적인 체육시설로 자리해 왔다. 또 2001년부터는 KCC이비스의 홈구장으로 활용하면서 농구팬을 비롯한 많은 시민이 찾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는 노후화된 시설과 안전도 C등급 판정, 협소한 경기장과 주차 공간, 편의시설 부재 등의 문제로 현재 신축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신축 체육관 설계에 대해 송 의원은 "새 체육관을 농구 중심으로 설계하면

다른 실내스포츠와 규모가 맞지 않거나 종목의 국제경기나 전지훈련 등의 유지가 불가능해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스포츠 경기도 중요하지만 대규 모인 원수용이 가능한 시설인 만큼, 각종 전시나 컨벤션, 박람회, 콘서트 등의 개최를 염두에 둔 설계여야만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타 지역 프로농구단이 연고지를 이전한 사례도 거론했다. 그는 "KCC와 협력해 상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지만, 한 달 전 부산 KT소닉붐 농구단이 수원으로 연고지를 이전한 점도 고려해 체육관을 다목적으로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 재정 확충 등을 위해 KCC에서 신축비 일부를 출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송 의원은 "광주 KIA 챔피언스필드는 994억원 중 300억원,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는 1,666억원 중 500억원을 구단 측에서 출연했다"면서 "전주도 해외 우수 경기장처럼 경기장 명칭 독점 사용권 적용을 통해 부족한 재정 충족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의회 예결특위 구성

백영규 위원장 | 이윤자 부위원장

전주시의회는 15일 내년 본예산과 앞으로 있을 추가경정예산 등을 다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백영규 의원(중앙·완산·중화산·2동), 부위원장에 이윤자 의원(비례대표)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백영규 위원장은 "관행적으로 반복해서 편성하거나 사업 진행에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은 없었던 것 면밀히 살피는데 중점을 둘 생각"이라며 "코로나19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적체적소의 예산집행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윤자 부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시민의 삶의 질 증진에 재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앞으로 위원장을 보필하고 역량이 뛰어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소중한 고견에 귀 기울여 재정 능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임기로 활동하게 되며, 연말에는 2022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김윤상 기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세계적 산단으로

### 민주 김수홍 의원, 특별법 대표발의... 국식을 산업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포함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이 15일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제2차 추경을 통해 국민에게 지급하려고 하는 재난지원금은 국민 80%가 아닌 전 국민에게 지급돼야 한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강화 및 백신·방역 보장을 위해 이번 추경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당초 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보다 6,000억원을 추가로 증액,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

치 등으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대폭적인 증액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시급히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 계획대로 11월까지 집대결을 형성하는 데 백신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돌봄 예산의 확대, 입원환자 치료제 구입, 진단검사비 지원, 격리지원차표비,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조사 분석 등 2,000억원 이상의 방역 관련 예산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최근 코로나 확진자 급증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추경안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보다 든든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안정적인 백신공급과 예방접종 확대,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번 제2차 추경안의 시급한 처리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이와 함께 식품산업에 대한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및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해 산업활동을 뒷받침할 R&D에 대한 지원책을 포함하는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이 외에도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교육기관, 부대시설의 설치, 물품, 종사자의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공간을 갖춘 배후복합도시의 조성내용도 법안에 포함시켰다.

김수홍 의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완공 5년을 맞는 내년부터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낸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 식품단지로 발전하길 기대하며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계호 농해수위 위원장, 위성곤 농해수위 여당 간사를 비롯한 다수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본 법안의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그 외 윤주덕 기대위원장, 전복권 의원 등을 비롯한 23명의 의원이 뜻을 모았다. /유호상 기자

## "생활편의형 건축물 증·개축 허용 범위 완화"

### 김윤철 시의원 "민원 발생 잇따라... 조례 개정 통해 필요"

건축물 불법증·개축에 따른 각종 민원과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김윤철(민생당, 풍남·노송·인후동) 의원은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생활형이나 생활편의형 불법증·개축 행위에 따른 민원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 법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사례로 꼽은 생계형이나 생활편의형 불법증·개축 행위는 텃밭을 가꾸기 위한 농기구 보관용 소형 창고를 만들거나, 옥상 방수나 단열을 위한 지붕 공사 같은 것들이다.

그는 "건축물 증·개축은 불법 행위도 있지만 대부분 기초적인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현행 건축 법규상 위반 사항으로 적발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나 철거 통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의적인 불법 건축 행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런 건축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건축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사례로 꼽은 생계형이나

## 박용근 도의원 "전북패싱 전은 카드 사용 지양해야"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이 15일 전북은행에 대한 비판을 내놴다. 박 의원은 "전북은행이 600억 원 규모의 연수원을 건립하는 데 있어 설계를 수도권 업체에 맡기는데 이어, 업체 선정

역시 전북 건설사 입찰을 배제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전북도청이 2005년도부터 일반회계 법인카드를 전북은행 카드로 사용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추계 예산도 665억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을 결제하고 있다"면서 "전북은행의 전북 패싱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계약 해지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고교생 열린 토론회  
상산고 '가리사니' 팀 우승

전북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2021 전북 고등학생 열린 토론회에서 상산고등학교 '가리사니'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지역 8개 학교에서 총 19개 팀이 참가해 예선을 통과한 4개 팀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4층 회의실에서 본선대회를 열고 공직선거에 온라인 투표를 도입해야 한다 라는 논제로 열린 찬반토론을 펼쳤다.

그 결과 상산고등학교 가리사니팀이 금상을, 전주신희고등학교 다카요팀이 은상을, 상산고등학교 모래나팀과 남원여자고등학교 아리아리팀이 동상을 수상했다. /유호상 기자